

경기도는 언제나 맑음!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기회의 경기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접속주소

<https://www.gg.go.kr/audit>

문의전화

031-8008-2973 (취업 심사)
031-8008-3846 (재산변동 신고)
031-8008-2089 (기타 제도 안내)
031-230-4532 (소방직 안내)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



접속주소

<https://www.peti.go.kr>

상담센터

1522-4273

부정한 청탁 · 알선 행위 금지 의무 5

부정한 청탁 · 알선 행위 금지 의무란? (법 제18조의4 제1항)

✓ 의무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금지 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 (제5조 제1항)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됨.

1. 인가·허가·면허·승인 검사 등에 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의 수상, 포상, 우수자 선발 등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등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기금 등을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 등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등
11.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 등 조사 대상에서 특정개인 및 단체를 선정·배제 되도록 하거나, 조사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
12.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이해충돌 방지 및 비밀엄수 의무 6

이해충돌 방지 의무란? (법 제2의2 제1항)

- ①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토록 해서는 안 됨.
- ② 또한, 퇴직 후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비밀엄수 의무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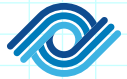
- ①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됨.
(단,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

(참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청렴의 의무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① 모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



경기도 감사위원회



한눈에 보는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제도

공직자윤리법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

1

재산변동사항 신고란? (법 제6조 제2항)

✓ 신고 대상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4급이상 공직자)

※ 특정분야(감사, 회계, 인허가, 조세, 부동산 유관부서 등)는 5급 이하 공직자도 대상임.

✓ 신고 내용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 사항

✓ 신고 기간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신고 방법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로그인 후 신고

✓ 위반 시 제재

위반사실 법원 통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1) 취업승인 사유 (시행령 제34조 제3항)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제한 제도

2

취업제한 제도란? (법 제17조 및 제18조)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1. 취업제한여부에 대해 확인받거나
2.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가능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참고 2) 여부를 심사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가능'

〈취업승인 심사〉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참고 1) 해당 여부를 심사

→ 취업승인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승인'

임의 취업 시? (법 제29조 제1호, 제30조 제3항)

- 위반 사실 법원 통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후적인 취업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1. '취업제한' 결정 및 '취업해제' 조치
2. 고발여부 심사
※ 고발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법 제17조 제1항)

- 인사혁신처 고시('23.12.29.) : 23,259개
- (영리) 18,904개, (비영리) 4,355개
※ 道 공공기관 지정(5) :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대상기관 조회 : 공직윤리시스템(PETI)
- 취업·행위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기관명-조회)

업무취급제한 제도

3

업무취급제한 제도란? (법 제18조의2)

- 모든 공직자(재산등록 여부 및 직급 무관)는 재직 중 재정보조, 인·허가 등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면 취업한 기관에서 해당 업무의 취급이 영구적으로 제한됨.
- 특히,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업무 외에도 퇴직 전 2년간 소속기관이 취업한 기관에 대해 처리한 '취급제한 업무'를 맡는 것이 제한됨.
-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 심사를 받아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업무취급이 가능함.
- 신청시기 : 제한업무 취급 전(취업 전, 후 모두 가능)

업무취급 승인 대상 업무는?

본인업무기준 심사대상자 (3급 이하 모든 공직자)

⇒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취급제한 업무 (참고 2)'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 (2급 이상 모든 공직자)

⇒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취급제한 업무' + 퇴직 전 2년간 소속기관과 취업한 기관 간 처리한 '취급제한 업무 (참고 2)'

〈업무취급승인 심사〉

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경우 취급이 가능

제도 위반 시? (법 제29조 제2호, 제30조 제1항·제3항)

- 본인이 직접 처리한 '취급제한 업무'를 취급한 경우
- 고발여부 심사 ※ 고발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 전 2년간 소속기관과 취업한 기관 간 처리한 '취급제한 업무'를 취급한 경우
- 위반사실 법원 통보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내역서 제출 및 취업사실 신고

4

업무내역서 제출? (법 제18조의3)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후 2년간 취업한 기관(심사대상기관)에서의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퇴직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2년 경과 후 1개월 이내(2회 제출)
- 업무내역서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제재
- 위반사실 법원 통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사실 신고 및 취업이력공시란? (법 제19조의4)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후 10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이력을 조사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공시(소속기관 대표 누리집)
- 취업사실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제재
- 위반사실 법원 통보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2) 밀접한 관련성 범위 (법 제17조 제2항)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